"쇄신이냐" "안배냐" 딜레마

■ 통합민주당 공천기준 논란

부정부패자 배제 등 고심…공은 공심위로

통합민주당이 19일부터 총선 후보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어떠한 공천 기준을 마련할 것인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단 통합민주당은 철저한 공천 쇄신을 통해 불리한 총선 판세를 뚫고 나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한나라당 이상의 강력한 공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한나라당이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공천신청자격을 박탈키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최소한 한나라당 이상의 공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은 겉으로는 "쇄신에는 예외가 없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공천 신청을 준비중인 주요 인사들이 공천 기준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장 총선기획단장을 맡은 신계륜 사무총장은 2006년 2월 대부업체 '굿머니'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다.

2002년 대선자금 불법모금 혐의로 구속됐던 정대철 고문과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씨 등도 부정부패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노 대통령의 오른팔인 이광재 의원도 현재 국세청 고위직 인사개입 의혹으로 검찰 내사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2·31 특사로 사면·복권된 뒤 목포 출마를 모색하고 있는 김대중(DJ) 전 대통령 측 박지원 비서실장과 2002년 금품수수 혐의로 수감됐던 DJ 차남 김홍업 의원 등의 공천 여부도 관심거리다.

여기에 영등포을 출마를 준비중인 김민석 전 의원도 2005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때 SK 손길승 회장으로부터 2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드러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은 한나라당처럼 세부 공천기준을 당헌에 명시하지는 않고 공천심사위에 재량권을 넘기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천기준 적용의 '칼자루'는 박재승 위원장을 비롯한 공심위에 넘겨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박 위원장은 최근 박지원 실장, 김홍업 의원 등의 공천과 관련, "공천 원칙과 방침에서 전혀 예외가 없다"며 성역없는 공천쇄신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일각에서는 손 대표가 공천 문제를 공심위에 넘기면서 쇄신 공천을 명분으로 사실상 동교동을 외면하는 수순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현실적으로 통합민주당 지도부가 정치적 기반인 호남의 최대 주주인 동교동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공천의 모든 재량권이 공심위에 넘어갈 경우, 뜻밖의 결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통합민주당, 민주 몫은?

최고위원 5명 추천 합의…공심위원 놓고 신경전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당이 16일까지 통합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마무리 지을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 인사들의 지도부 및 공천심사위원회 진입 여부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호남의 공천 쇄신을 위해서는 이번 총선에서 호남 지역구 출마에 나서는 인사들은 공천심사위 구성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일단 신당과 민주당이 잠정적으로 합의한 통합민주당의 최고위원 수는 12명. 신당이 7명, 민주당 5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신당 측에서는 기존의 최고위원 진용을 그대로 가져갈 것으로 전망되며 민주당은 현 8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5명을 추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은 박재승 위원장이 외부 인사(6명) 영입을 거의 확정함에 따라 당내 인사 5명은 신당이 2명, 민주당이 3명을 각각 추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신당과 민주당에서는 조만간 공심위원 추천을 마친다는 방침이지만 내부적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우선 신당은 계파색이 엷고 쇄신 공천에 적합한 인사를 골라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정 계보로 분류된 인사를 공심위원으로 추천했다가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당내에서는 386 출신 수도권 지역 일부 의원들이 공심위원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도 공심위원 추천에 신중한 모습이다. 이번 총선에서 호남에 출마하는 인사를 공심위원으로 추천했다가는 공심위의 공정성 논란은 물론 지분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광주지역 모 예비후보 측에서는 민주당 몫 공심위원 배정설을 흘려 벌써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괜히 호남지역 총선 예비후보를 공심위원으로 추천했다가는 공천의 공정성 등의 문제로 논란을 빚을 수 있다"며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인사를 공심위원으로 추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孫·鄭·康 총선 거취?

수도권·지역구 동반 출마 무게…최종 결심은 유보

통합민주당(가칭)의 총선 후보 공모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통합민주신당의 손학규 대표와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전 통일장관, 강금실 최고위원 등 '간판급' 인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총선 정국을 정면돌파한다는 차원에서 수도권 지역구 동반 출마설이 힘을 얻고 있지만 최종 결심은 계속 유보되고 있는 상태다.

손 대표는 최근 거처를 옮긴 서울 중구에서의 출마설 등이 제기되고 있고, 정 전 장관의 경우 서울 종로와 함께 이명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정두언 의원이 일전을 공개 제안했던 서대문을 출마설도 비중있게 거론된다. 강 최고위원의 경우 18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한길 의원의 서울 구로을 출마설이 나돈다.

그러나 여전히 당 일각에서는 이들이 비례대표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상징성을 감안할 때 지역구 출마보다는 전국을 돌며 지원유세에 나서는 것이 득표율 제고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인 셈이다.

원칙대로라면 이들이 지역구에 출마하려면 이달 19~24일 진행되는 후보 공모 절차에 응해야 한다.

그러나 전략공천의 길이 열려 있는 만큼, 마감 시한에 구애를 받지 않을 공산이 커 보인다. 신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중대하고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역구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전략공천을 하는 쪽으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거취는 당사자 개개인의 판단보다는 당의 총선전략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질 문제라는 점 때문에 최종 선택은 일단 공천신청 추이를 본 뒤 막판에 '패키지'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우세한 셈.

실제로 손 대표는 최근 주변 인사들에게 "내 출마문제는 당에서 요구하는 것을 받들어 가장 마지막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정 전 장관도 주변의 조언을 구하며 막바지 고민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최고위원은 이날 "아직 거취를 밝히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연합뉴스

광산 乙 '거물들의 전쟁'

총선 새 선거구…이용섭 前장관·김효석 원내대표 등 격돌 예상

오는 18대 총선에서 분구를 통해 새로운 선거구로 탄생할 '광산구 을'(가칭) 지역에서 '거물들의 전쟁'이 벌어질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건설교통부 장관직을 끝으로 퇴임한 이용섭 전 장관이 이달 초 예비후보 등록을 한데 이어,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도 이 선거구에 출마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청장과 국세청장을 거쳐 참여정부에서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지내는 등 중앙정부의 핵심요직을 두루 지낸 이 전 장관은 지난 1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사무실을 여는 등 표밭갈이를 시작했다. 이 전 장관은 일부 구의원을 비롯해 지역 유력인사들과의 대면 접촉을 늘리고 있으며, 이미 상당한 지원세력을 확보하는 등 선거운동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전 장관은 통합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있는 상태다.

결전 상대인 김 원내대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고 있으나,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곧 예비후보에 등록한다' '어디에 선거사무실을 개소한다'는 등의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원내대표 측은 이와 관련 '선거구 획정이 끝나기 전까지는 어떤 공식적인 발표도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직 지역구 의원으로서, 선거구 획정작업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다른 지역구 출마가 거론된다는 사실이 부담스럽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 측근은 그러나 "원래의 지역구인 '담양·곡성·장성'이 깨질 경우 광산으로 지역구를 변경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조심스럽게 털어놨다.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담양·곡성·장성 선거구가 깨질 가능성이 큰 만큼 김 원내대표의 타지역 출마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김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광산 출마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전 장관과의 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13일 국회 통외통위에서 김원웅 위원장과 최성 의원, 이화영, 진영 간사, 전문위원들이 한미 FTA 비준안 상정 이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FTA비준안은 상임위 공청회와 청문회를 통해 통외통위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돼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투표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연합뉴스

한미 FTA 비준동의안 진통 끝 상정

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이 진통 끝에 5개월여만인 13일 통외통위에 정식 상정됐다.

통외통위는 지난 11일 비준동의안을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통외통위원장실 점거로 실패했으며, 12일에도 강기갑 의원의 회의실 점거로 회의장을 변경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회의가 열린 이날도 민노당 의원 9명 전원과 당원 10여명이 회의장 한쪽 입구를 막아 통외통위원들의 입장을 물리적으로 저지해 위원들은 반대편 입구로 회의장에 입장하기도 했다.

이날 상정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향후 통외통위 공청회와 청문회를 거친 뒤 통외통위 법안소위에 회부돼 집중 심사를 받게 되며 이후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된다.

그러나 한미 양국간 협상 단계에서부터 국회에서 논란을 일으켰던 한미 FTA 체결 문제는 상임위 심사 뿐 아니라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돼 17대 국회 처리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한나라당은 17대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통합민주당(가칭)은 명확한 당론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18대 국회에서나 처리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이 당론으로 한미 FTA 비준동의를 반대하고 있는데다 총선을 두달여 앞둔 상황에서 농촌 지역구 의원들이 총선 전 한미 FTA 비준에 동의하기는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장애요인도 있다. /연합뉴스